

# 현안과 과제

■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 목 차

---

## ■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개 요 .....	1
2.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	2
3. 시사점 .....	9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관   :   주   원   이   사   대   우 (2072-6228, juwon@hri.co.kr)

경 제 연 구 실   :   홍 준 표 연 구 위 원 (2072-6242, jphong@hri.co.kr) 외 3명

## Executive Summary

### □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와 시사점

#### ■ 개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으로서 한미정상회담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며 최근 현안에 대한 논의가 예상된다. 이에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 의제를 예상해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북핵 문제)** 2002년 북한이 농축우라늄 개발 계획을 시인하면서 본격화된 북핵 위기 이후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다루어졌다. 최근에도 지속된 핵실험 및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북한은 핵개발의 고도화를 모색했다. 북핵 문제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도 핵심 현안으로 다뤄질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및 국제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등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드 배치)** 사드 배치에 대해 한국은 반입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 및 환경영향평가가 우선이라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조속한 배치 및 실전 운용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사드 배치 및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속한 배치를 주장하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우리나라는 사드배치 철회보다는 배치 시기 및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전달하고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한미간 공감대를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 재협상)** 트럼프 정부의 공정무역 및 보호무역 강조 기조, 고위 관료들의 언급 등 한미FTA 재협상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교역으로 인한 상호 이익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한편 미국측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의 한미FTA 업그레이드 필요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자동차 및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이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 ■ 시사점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양국 모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 향후 4~5년간 한미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회담인 만큼 양국 정상간의 돈독한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첨예한 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하는 한편, 향후 논란 재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첫째, 굳건한 한미동맹의 재확인을 통해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간 상호 호혜적이며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북핵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 우려를 불식하고,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해야 한다. 셋째,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민감한 이슈에 대해 확고하고도 투명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외교적 신뢰감을 높이고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 민간 모두 다방면에서 미국 측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한미 FTA의 효용성에 대해 미국 소비자 대상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 1. 개요

-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으로서 한미정상회담이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며 최근 현안에 대한 양자간 논의가 예상됨

- 역대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은 한미정상회담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2003년 5월 15일 워싱턴에서 부시 전 대통령과 가졌으며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한 동맹관계 지속을 다짐
-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2008년 4월 19일 캠프데이비드에서 부시 전 대통령과 가졌으며 주한미군의 축소, 한미FTA의 연내 비준, 글로벌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 등에 대해 논의
- 박근혜 전 대통령도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2013년 5월 7일 워싱턴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가졌으며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제시하는 등 양국간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

-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쟁점 의제를 예상해보고<sup>1)</sup>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한국과 미국은 대북 관계 및 사드 배치 이슈 등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피력

- 공약에 근거하면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강하고 대북 정책의 핵심 과제는 '대화'와 '교류'임
- 올 상반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및 미국 대학생의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 및 사망 사건 등으로 미국내 북한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강해짐
- 문재인 대통령은 사드 배치 관련, 진상파악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적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
- 미국 상원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2017.6.26)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미군과 한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임을 강조
-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를 포함해 모든 무역협정을 재검토할 것을 지시한 만큼, 한미FTA 재검토 의제 역시 이번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됨

1) 국내 주요 언론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북핵 문제 해결 방안, 한미 동맹 발전 방향, 경제 협력 및 글로벌 협력 심화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 그러나 최근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사드 배치 이슈 등 예민한 사항이 예기치 않게 대화 주제로 오르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2. 한미정상회담의 주요 의제

### ① 북핵 문제

- (현황) 북한의 핵개발이 고도화되면서 북핵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의 핵심 현안으로 부각
  - 북핵 문제는 양자 및 다자간 합의의 진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북핵으로 인한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가 심화
    - 1989년 북한 영변에서 대규모 핵 시설 단지가 발견되면서 시작된 북핵 문제는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까지 27년 이상 지속
    - 그동안 북핵 문제를 둘러싼 남북대화, 북미협상, 6자회담은 합의 진전과 후퇴의 연속이었음
  - 2002년 제2차 북핵 위기를 비롯해 지난 10년간 5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북핵 문제는 한미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로 부각
    - 2002년 10월 북한이 농축우라늄 개발 계획을 시인하면서 제2차 북핵 위기가 본격화되었고, 이때부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부각
    - 북한은 지속된 핵실험을 통해 핵의 소형화, 경량화를 어느 정도 완성한 것으로 보이며, 단거리 및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통해 고도화를 모색
    - 이와 관련하여 한미는 북핵 해결을 위한 한미공조 강화 의지를 지속 표명

#### <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다뤄진 북핵 관련 주요 의제 >

구분	주요 내용
2003.05.14 (노무현, 부시 대통령)	- '북핵문제의 평화적 노력'이라는 합의가 담긴 공동성명 발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적 협력과 평화적 수단 활용을 강조
2008.04.15 (이명박, 부시 대통령)	- 북핵 불용과 평화적·외교적 해결원칙을 재확인 ·6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프로그램 폐기 지향
2009.11.19. (이명박, 오바마 대통령)	- 한미 양국 모두 북핵 불가에 공감 ·미국은 북한 핵 포기 시 경제적 지원 제공의사를 밝힘
2013.05.07 (박근혜, 오바마 대통령)	- 한미 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 ·북한의 평화로운 비핵화 달성을 위한 확고한 의지를 표명
2014.04.25 (박근혜, 오바마 대통령)	- 북한 핵문제 관련 긴밀한 대북공조 강화 합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 협력을 지향

자료 : 각종 언론 보도자료를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주 : 2003년 이후 25차례 열린 한미정상회담 가운데 북핵 관련 주요 회담만 정리.

- (예상 의제)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한 협력 방향,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정책 공조 및 국제공조 강화,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의견 교환 등
  - 한미동맹의 전통적 신뢰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미 정상의 우의를 다지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
    - 이번 회담은 한미 양국 모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만나 향후 4~5년 간 한미관계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정초회담(定礎會談)'인 만큼 양국 정상간 새로운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임
  - 북핵문제 해결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한미의 대북정책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재확인할 것으로 예상
    - 한미 양국 모두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에 이견이 없는 만큼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접근이 근본적으로는 동일하다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한미공조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의 방향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전망
    - 북한의 도발에는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긴밀한 공조하에 제재와 대화 등을 활용하여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미·일 공조는 물론 중국과의 협력도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 북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3각 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공유와 함께,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
- ※ 미중 외교안보대화(6.21)의 최고 의제 역시 북한 문제였으며,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북 외교·경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요구. 이에 미국과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과 압박의 수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로 합의.

## ② 사드 배치

- (현황)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상반되면서 한반도가 사드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의 주무대가 되고 있음
- (자주외교와 동맹외교의 균형) : 미국과 중국은 사드 배치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드배치 문제가 강대강(強對強) 속 한국이 풀어야 할 군사·외교적 핵심 사안으로 부상
  -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동시에 제1교역국인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깊이 연관
  - 미국은 한미동맹에 있어 중요한 사안인 사드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반면, 중국은 사드배치에 반발하며 한국에 경제적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음
  - 따라서, 미중 간 이해관계의 갭이 심화될수록 한국의 군사·외교적 입장은 복잡해지고, 자주외교와 동맹외교의 새로운 균형이 필요한 상황
- 중국은 한반도내 사드배치는 한국의 美MD체계 편입이라고 인식함과 동시에,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로 자국의 군사안보가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사드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 이슈로 부각

< 사드배치 주요일정 >

주요국	사드배치 일자	사드배치 일정
'16	1월	▪ 北, 4차 핵실험 실시
	2월	▪ 한미, 사드배치 공식협의 결정 발표
	7월	▪ 한미 사드배치 결정 공식 발표
'17	2월	▪ 롯데, 성주 골프장 부지제공 안건 의결
	3월	▪ 일부 사드포대(발사대 2기와 관련 장비) 국내반입
	4월	▪ 사드 핵심장비 기습배치(X밴드 레이더, 발사대 등)

자료 : 각종 언론보도 참고 현대경제연구원 작성.

<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인식 >

	내용
한국의 美MD체계 편입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드체계는 자국을 겨냥한 미국MD의 일부이며, 한국이 편입된다고 인식</li> <li>▪ 궁극적으로 중국의 핵보복 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식</li> </ul>
한·미·일 삼각동맹 강화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내 사드배치를 통해 한미일 3국 간 군사력의 통합운영능력 제고를 우려</li> <li>▪ 한국이 미국의 충실한 동맹국가로 굳힘 하는 것을 우려</li> </ul>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예상 의제) 韓美 양국의 새 정부 첫 정상회담인 만큼, 한미동맹의 틀을 깨지 않으면서도 사드 배치 및 방위비 분담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
  - (韓美, 탐색전 같은 상견례) : 사드 배치 시기 및 방위비 분담에 대한 한미 간 입장차이가 존재하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향방에 따라 향후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한미 관계가 결정 될 것으로 보임
    - 사드배치에 대한 미중 간 대립은 그동안 한국이 추구해왔던 안미경중(安美經中,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의 틀이 외교적으로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음을 의미함
    - 더욱이, 새 정부가 사드 배치 시기 및 방위비 분담에 대해 트럼프 정부와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상호탐색하고 외교적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사드배치 철회보다는 배치 시기 및 절차에 대해 입장을 전달하는 등 한미동맹의 틀을 깨지 않는 선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
    - 우리나라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사드의 전면실전배치 시한을 늦추면서 미국 측의 '사드청구서'에 대한 대응카드로 활용할 전망
    - 또,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韓美 간 공감대를 확장하면서, 미국 측 방위비 분담 주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큼
    - 한편, 중국과 북한이 군사력 확보를 통해 한반도 내에서 '힘의 투사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 제고를 시도하는 만큼, 한미 동맹 공고화를 위한 공감대 구축도 진행할 예정

< 사드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견해 및 정상회담 방향 >

구 분	한국의 입장	미국의 입장	정상회담 방향
배치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드 추가반입 과정에 대한 진상 조사를 우선 실시</li> <li>▪ 골프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회논의가 우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속한 배치 및 실전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드의 전면실전배치 시한을 늦추면서 미국측의 '사드청구서'에 대한 대응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큼</li> <li>▪ 군사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韓美 간 공감대를 확장하면서, 미국측 방위비 분담 주장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큼</li> </ul>
비용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에 따라 한국 측이 새로 분담해야 할 방위비는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 측이 사드운용비 및 기타 방위비를 추가로 분담할 필요성이 있음</li> </ul>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 ③ 한미FTA 재협상

○ (현황) 미국 신정부의 공정무역 및 보호무역 강조, 미 정부 관료들의 언급 등 한미FTA에 대한 논의 여건 조성

- 미국 신정부의 공정무역 및 보호무역 강조 기조가 현실화되고 있음
  - 미국은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무역위원회'를 신설하고(2016.12.21) 위원장에 對 중국 강경파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를 임명
  - 트럼프 대통령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의 계획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2017.1.23)
  -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올해 3월, 'NAFTA 재협상 의사 초안'을 제출
  - 트럼프 대통령은 교역 대상국, 세계무역기구(WTO)와 맺은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2017.4.29)
  -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철강의 비중이 확대되면 미국 군사용 장비까지 외국산 철강에 의존할 우려가 있음을 표명하며 국가 안보와 연계시켜 수입 철강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발동하는 행정명령에 서명(2017.4.20)
- 대통령을 포함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이 한미FTA 재협상이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
  - 펜스 부통령은 한미FTA의 개선(reform) 추진을 언급(2017.4.18)<sup>3)</sup>
  - 로스 상무장관은 한미FTA의 재협상(reopen)을 언급(2017.4.25)<sup>4)</sup>
  -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FTA의 재협상(renegotiation) 혹은 종료(termination)를 언급(2017.4.28)<sup>5)</sup>
  -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무역협정에 대한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2017.4)에 따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모든 무역협정을 조사해 문제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을 계획이며, 여기에는 한미FTA도 포함됨

2) 초안은 대대적인 개정보다는 오래된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정도의 완만한 수정 논조를 유지하고 있음(자료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2017년 4월, 'NAFTA 재협상과 시사점').

3) 연합뉴스 보도자료(2017년 4월 18일, '펜스 美부통령, 한미 FTA '개선' 추진 언급').

4) Reuter 보도자료(2017년 4월 25일, 'U.S. commerce secretary eyes more trade moves: WSJ').

5) Reuter 보도자료(2017년 4월 28일, 'Exclusive: Trump vows to fix or scrap South Korea trade deal, wants missile system payment').

- (예상 의제) 한미 교역으로 인한 상호 이익 및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도 미국의 이익 증대의 방향으로 한미FTA 업그레이드의 필요성을 교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
  - 한미FTA 이후 세계 무역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간의 교역은 증가했으며 이러한 양국간의 교역 증진에 대한 우호적인 확인이 예상됨
    - 한미 FTA 발효 이전인 2011년과 발효 5년차인 2011~2016년간 한국의 對세계 (상품)무역액은 연평균 3.5%씩 감소
    - 동 기간 한국의 對미국 (상품)무역액은 연평균 1.7%씩 증가
  - 한국의 對미국 직접투자도 한미FTA 이후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미국내 많은 일자리를 창출
    - 한미FTA 발효 연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의 對미국 직접투자 누적액은 약 370억 달러<sup>6)</sup>로서 특히 2016년에는 해외직접투자국 중 1위가 미국에 대한 투자임
    -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 중 상위 12개 기업은 2015년에 미국내 약 3만 7천개의 일자리를 신규 창출<sup>7)</sup>
  - 미국 역시 한미FTA가 미국 교역에도 이익이었다는 점을 인식
    -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FTA가 체결되지 않았다면 2015년 미국의 對한국 상품무역은 440억 달러 적자를 달성했겠지만, 한미FTA 체결로 인하여 이 적자 금액은 158억 달러 줄어든 283억 달러를 기록했음<sup>8)</sup>
    - 한미FTA 미체결 대비 체결로 인한 미국의 대한국 상품무역 적자액 축소폭(158억 달러)는 NAFTA로 인한 對캐나다(177억 달러) 및 對멕시코(132억 달러) 상품무역 적자액 축소폭을 제외하고는 제일 큰 개선 효과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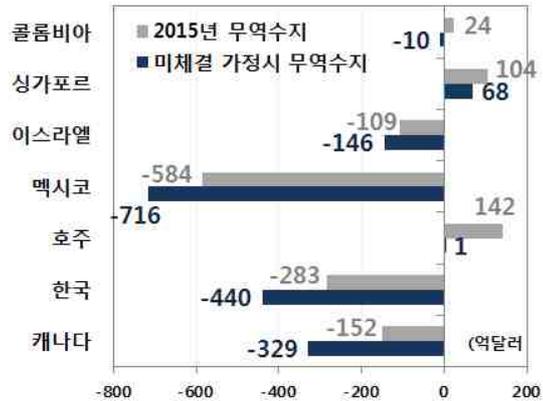
6) 한국의 對미국 직접투자액은 2011년 73.2억 달러, 2012년 57.2억 달러, 2013년 57.7억 달러, 2014년 57.6억 달러, 2015년 68.1억 달러, 2016년 129.0억 달러(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7) 자료 : ① Washington Post, 2016년 8월 16일자 보도자료 'South Korea is a crucial U.S. partner', 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년 2월 20일, '미 신정부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  
 8) 자료 : 미국 무역위원회(USITC), 2016년 6월, 「Economic Impact of Trade Agreements Implemented under Trade Authorities Procedures, 2016 Report」.

< 한국의 對미국 직접투자 >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 미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의 무역수지 개선효과 >



자료 : 미국무역위원회(USITC), 2016.6월, 「Economic Impact of Trade Agreements Implemented under Trade Authorities Procedures, 2016 Report」.

- 한미정상회담에서는 한미FTA가 양국간의 교역 증진에 기여했다는 점을 공유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미국 측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 제기가 있다면 한국의 자동차 및 서비스 시장 개방 동일 될 것으로 예상
  - 트럼프 대통령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하면서 당선된 만큼,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은 많고 수입은 적은 한국의 자동차 교역 부문(을) 한미 FTA 재협상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커 보임
  -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자국 기업의 한국내 사업 활동 원활화를 위한 여건 조성, 공학/건축/수의학 부문 등에서의 전문직 서비스 교류, 국내 약품 가격 결정 과정, 지적재산권 강화, 전자지도 서비스 시장 허용, 농산물 시장 개방 등에 대해 추가 논의할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sup>10)</sup>
- 한미 기업인들간의 교류 확대 및 상호 투자 측면에서는 미국 방문인 점을 고려하면 한국 기업들의 미국에 대한 투자 계획 발표가 부각될 가능성이 높음
  - 미국 정부의 보호무역 강화 움직임으로 한국 기업의 수출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내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확대 계획은 한미 교역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9) 한국의 자동차 부문 對세계 수출 중 對미국 수출 비중은 35%인 반면, 對세계 수입 중 對미국 수입 비중은 14%(자료 : 한국무역협회 중 HS 2단위에서 HS 코드 87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계산한 수치).

10) 자료 : USTR, 2016년, 「2017 Trade Policy Agenda and 2016 Annual Report」.

- 한미 양국 대표 기업들이 참석하는 회의에서<sup>11)</sup> 기존의 주력 산업뿐만 아니라 ICT 및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3. 시사점

- 최근 첨예한 이슈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법을 찾을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재발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굳건한 한미동맹의 재확인을 통해 외교적 신뢰를 회복하고, 한미간 상호 호혜적이며 동반자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
    - 한미동맹의 전통적 신뢰관계를 재확인하고, 한미 정상외의 우의를 다지는 호의적 분위기 조성을 통해 한미동맹 발전의 방향성에 대한 공감대 필요
  - 북핵 논의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우려를 불식하고,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입지를 확보
    -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 과정에서 ‘코리아 패싱’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동북아 지역 내 조정자(Mediator)로서의 전략적 입지를 확보
      - ※ 코리아 패싱이란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들이 한국을 배제하고 한반도 안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의미
  -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민감한 이슈에 대해 확고하고도 투명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여 외교적 신뢰감을 높임으로써 한반도 내에서의 미국과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리더십 필요
    - 미국에 대해서는 사드 등 군사동맹 이슈가 한미 양국에 모두 득이 되는 것임을 설명하는 등 우리나라의 안보전략에 대한 이해를 높여 양국 간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함
    - 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및 한미동맹 관계를 발판으로 동북아 지역 안정에 대한 미중 양국의 공조를 이끌어 냄으로써, 한반도에서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영향력 확대를 꾀해야 함

11) 대한상공회의소는 미국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6월 28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비즈니스 서밋’(Korea-US Business Summit)을 개최할 예정(자료 :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 나아가, 한미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북핵 해결에 대한 중국의 책임 있는 외교적 노력과 협력을 이끌어 낼 필요성도 있음
- 통상 전략을 재점검하고 협상 테이블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 필요
  - 이번 한미FTA 재협상은 이전과 달리 경제 논리뿐만 아니라 외교와 안보 분야와 함께 거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괄적인 통상 전략 마련이 요구됨
  - 對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산업은 투자 확대 및 수출지역 다변화 등의 전략이 필요하며, 미국 시장 내 경쟁이 치열한 산업은 제품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는 등 산업별 차별화된 대응 전략 마련
  -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예상되는 통상 리스크 대응 조직을 구축하는 등 변화하는 통상 여건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선제 대응 시스템 구축. 협력 및 정보공유를 위한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
  - 한미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에서 산업어젠다 발굴, 기업간 공동 R&D 확대 및 인력 교류, 미국 현지기업 및 지역공동체와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현지화 전략 모색 등 민간부문의 협력 채널 강화
  - 한미FTA가 양국의 교역 및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등 상호호혜적인 협정이며 한미FTA로 인해 미국내 소비자후생 증진 효과가 커졌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한미FTA에 대한 미국내 소비자 인식 제고 노력도 병행

이해정 연구위원 (2072-6226, hjlee@hri.co.kr)  
 이용화 연구위원 (2072-6222, yhlee@hri.co.kr)  
 천용찬 선임연구원 (2072-6274, junius73@hri.co.kr)  
 홍준표 연구위원 (2072-6214, jphong@hri.co.kr)